
2024년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2024. 11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2
2. 조사 개요	2
3. 조사 내용	2
제2장. 조사 결과	3
1. 불공정거래 경험	4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우려사항	10
3.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11
4.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12
5.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14
6. 과징금 활용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기금 도움 정도	16
7. 지원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	17
8.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타 의견	18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정책 도입을 건의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중소기업
▪ 표 본 수	700개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e-mail 조사 병행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71%
▪ 조사 기간	2024. 10. 21 ~ 2024. 11. 1
▪ 조사 기관	코데이터솔루션(주)

3. 조사 내용

- 불공정거래 경험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대응 방식 및 대처하지 못한 이유
-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
- 불공정거래 피해 복구 정도
- 불공정거래 재산상 피해 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보상 비율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우려사항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 필요성 및 이유
-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필요성 및 이유
- 과징금 활용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기금 도움 정도
- 지원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타 의견

제2장.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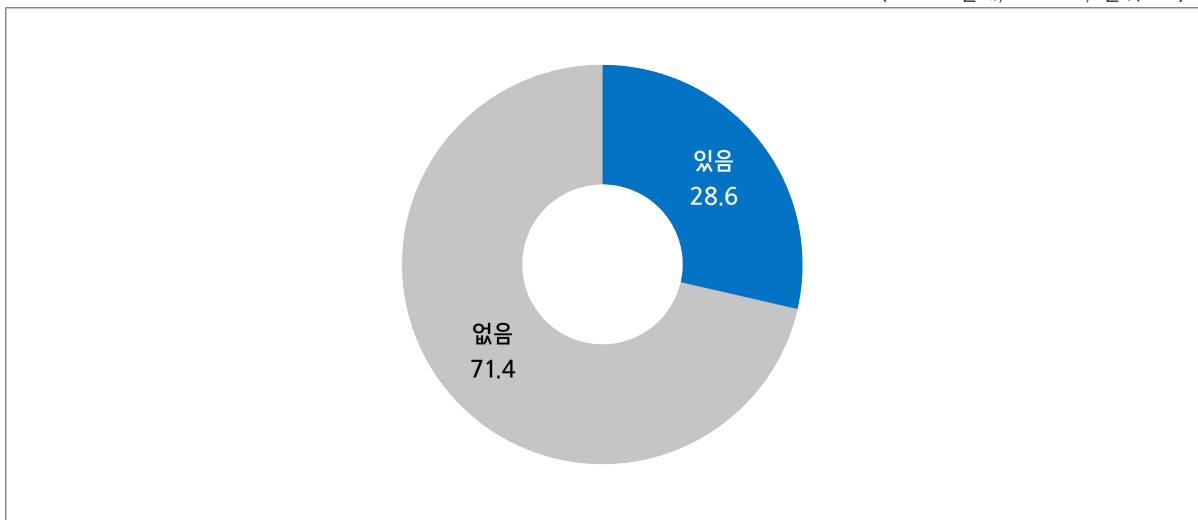
1. 불공정거래 경험

(1)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 거래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납품대금 후려치기·미지급·감액, 부당계약,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 중단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8.6%로 나타남

[그림 1]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1]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전체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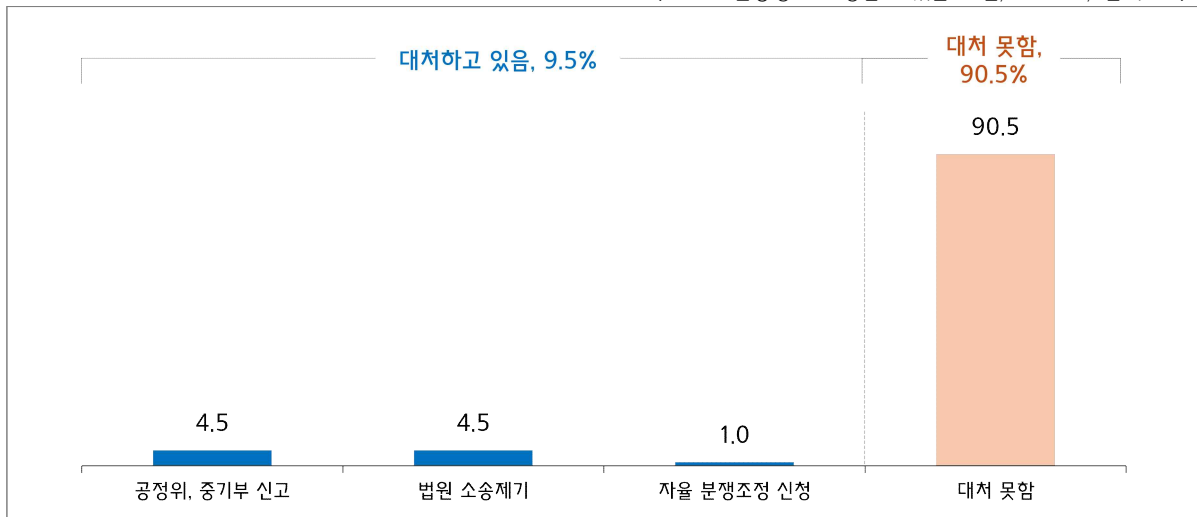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700)	28.6	71.4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대응 방식(복수응답)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처하고 있는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공정위, 중기부 신고’와 ‘법원 소송제기’(각 4.5%), ‘자율 분쟁조정 신청’(1.0%)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대응 방식(복수응답)

(Base: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n=200, 단위: %)



[표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대응 방식(복수응답)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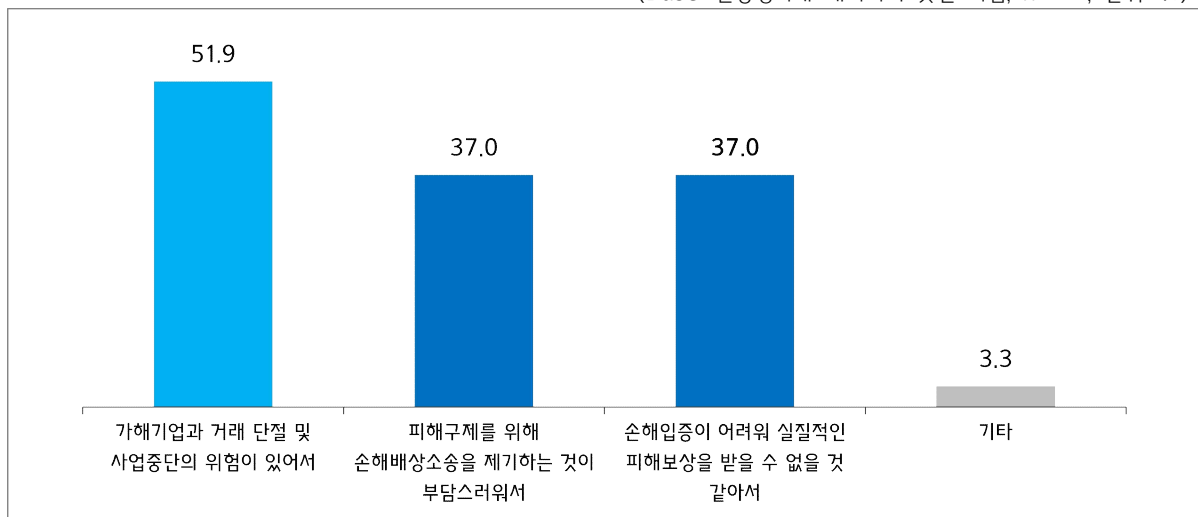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정위, 중기부 신고	법원 소송제기	자율 분쟁조정 신청	대처 못함
전 체	(200)	4.5	4.5	1.0	90.5

(3) 불공정거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 불공정거래를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 단절 및 사업중단의 위험이 있어서’(51.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각 3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불공정거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Base: 불공정거래 대처하지 못한 기업, n=181, 단위: %)



[표 3] 불공정거래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불공정거래 대처하지 못한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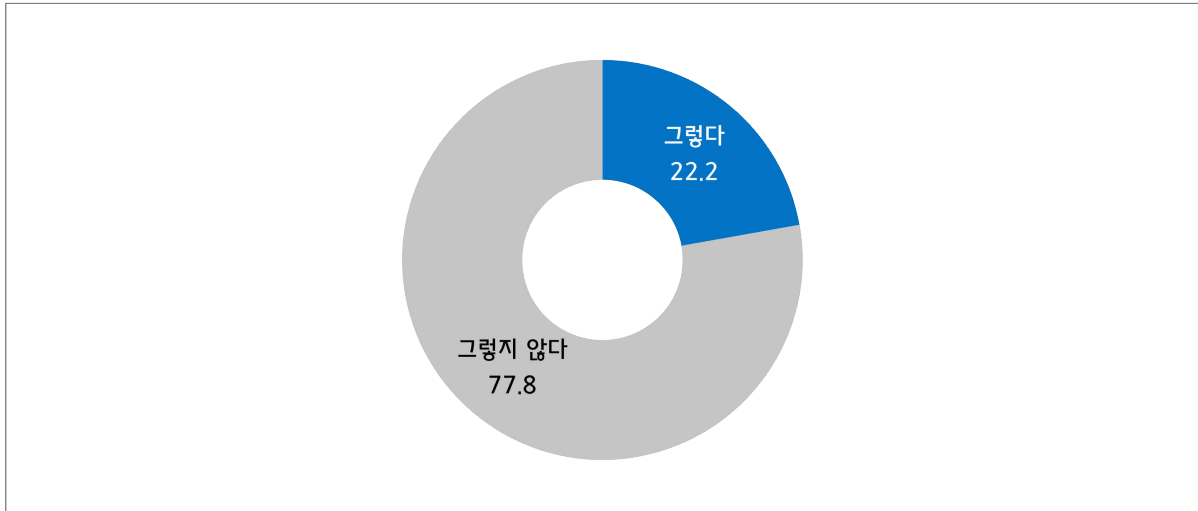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해기업과 거래 단절 및 사업중단의 위험이 있어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타
전 체	(181)	51.9	37.0	37.0	3.3

(4)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 및 피해 복구 정도

-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 또는 중기부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개 기업만이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진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피해가 충분히 복구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1개 기업은 전혀 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

(Base: 공정위, 중기부 신고 대처 경험이 있는 기업, n=9, 단위: %)



[표 4]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

(공정위, 중기부 신고 대처 경험이 있는 기업,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9)	22.2	77.8

[표 5] 불공정거래 피해 복구 정도

(공정위, 중기부 신고 대처 후 법적 제재 이루어진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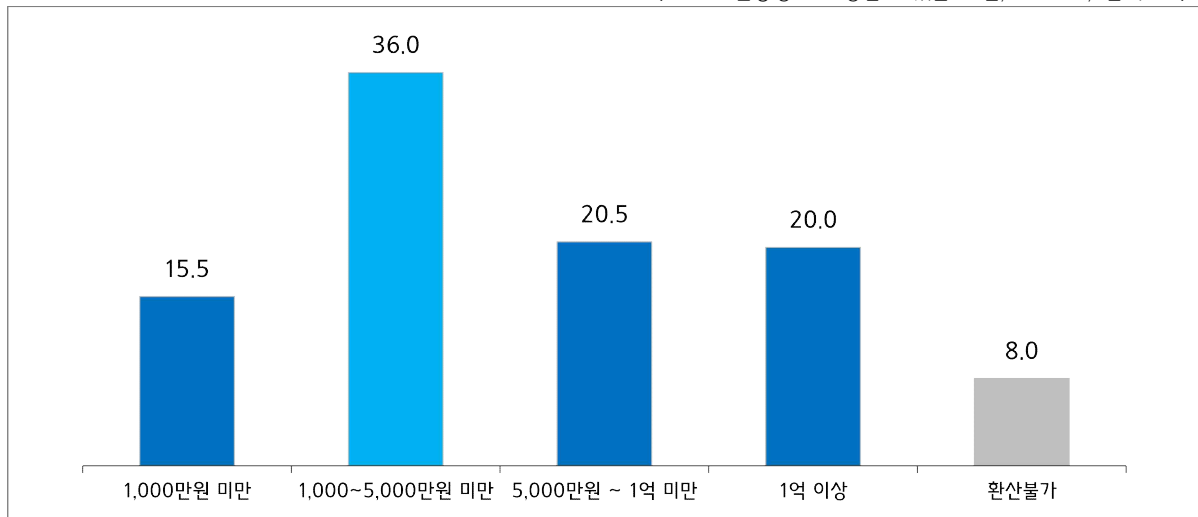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	50.0	0.0	0.0	50.0

(5)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

- 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는 ‘1,000~5,000만원 미만’ (36.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만원~1억 미만’(20.5%), ‘1억 이상’(20.0%)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

(Base: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n=200, 단위: %)



[표 6]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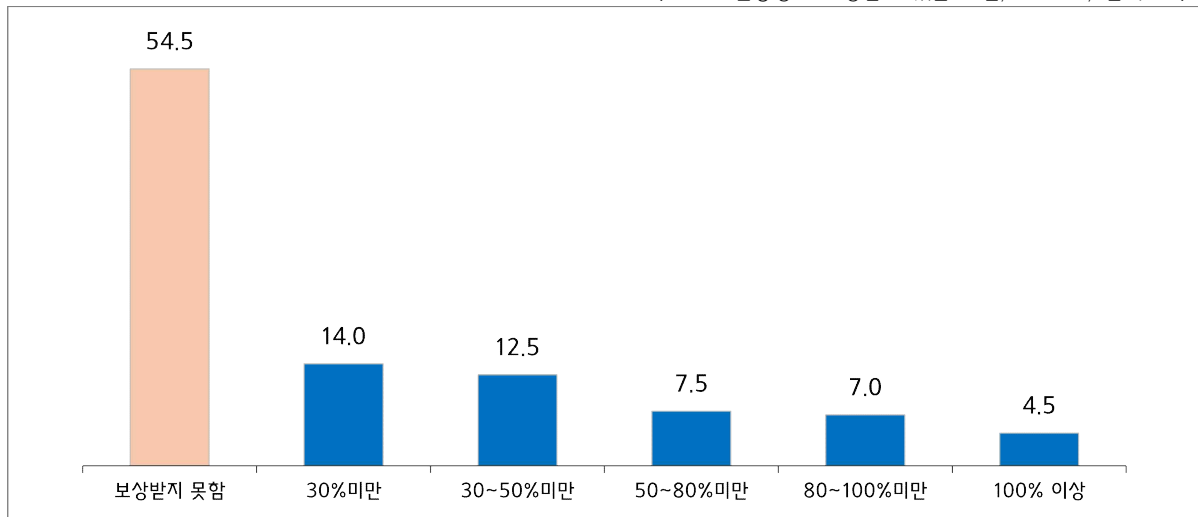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000만원 미만	1,000~5,000만원 미만	5,000만원 ~ 1억 미만	1억 이상	환산불가
전 체	(200)	15.5	36.0	20.5	20.0	8.0

(6) 불공정거래 피해 보상 비율

-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보상을 받은 기업들의 보상 비율은 피해 대비 '30% 미만'(14.0%), '30~50%미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불공정거래 피해 보상 비율

(Base: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n=200, 단위: %)



[표 7] 불공정거래 피해 보상 비율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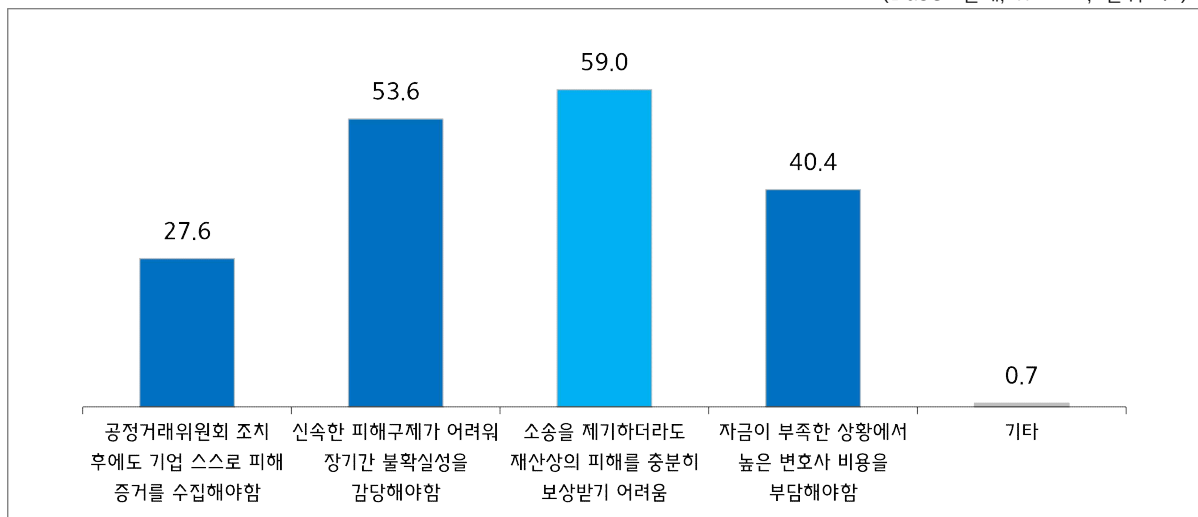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보상받지 못함	30%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전 체	(200)	54.5	14.0	12.5	7.5	7.0	4.5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우려사항(복수응답)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우려사항(복수응답)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8]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우려사항(복수응답)

(전체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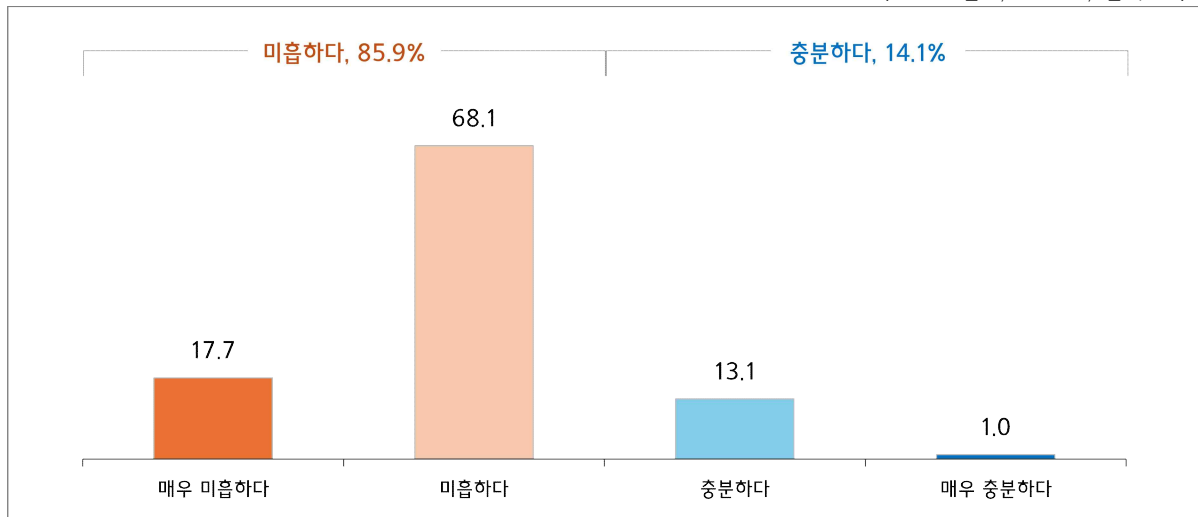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후에도 기업 스스로 피해 증거를 수집해야함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	기타
전 체	(700)	27.6	53.6	59.0	40.4	0.7

3.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동의를결제도 등의 제도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데 충분하다는 기업의 비중은 14.1%(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미흡하다는 기업의 비중은 85.9%(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효과에 대한 인식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9]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전체기업,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전 체	(700)	17.7	68.1	13.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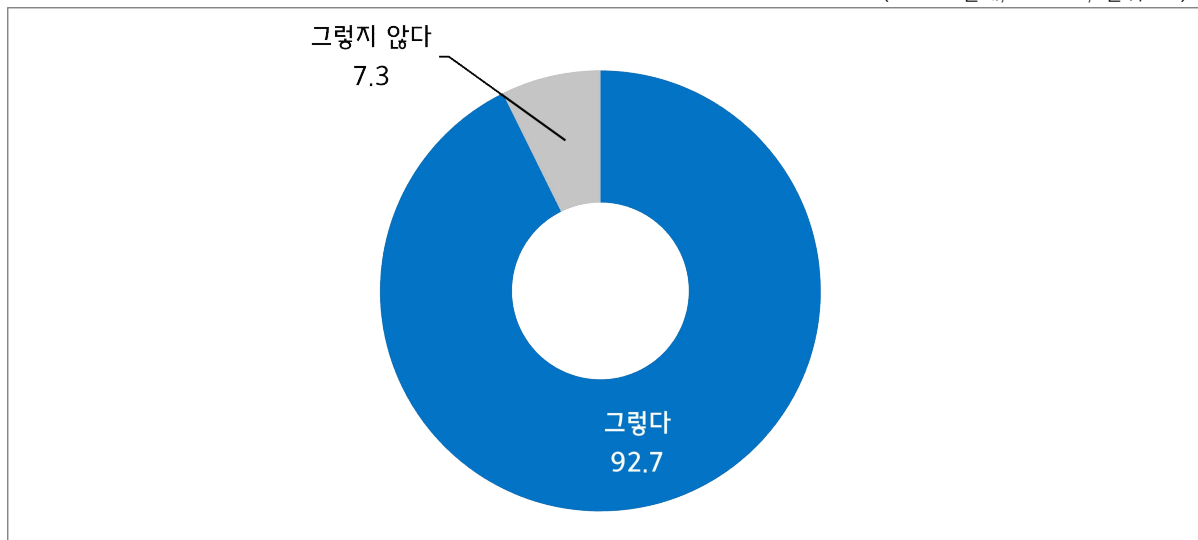
4.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1)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성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92.7%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9]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성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10]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성

(전체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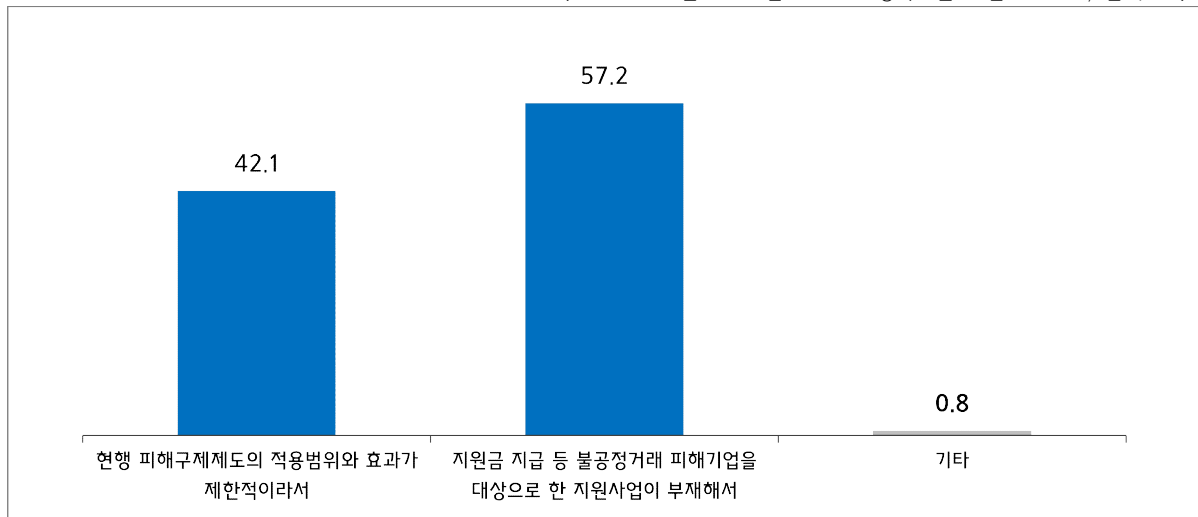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700)	92.7	7.3

(2)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한 이유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남

[그림 10]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한 이유

(Base: 새로운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n=649, 단위: %)



[표 11]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필요한 이유

(새로운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부재해서	기타
전 체	(649)	42.1	57.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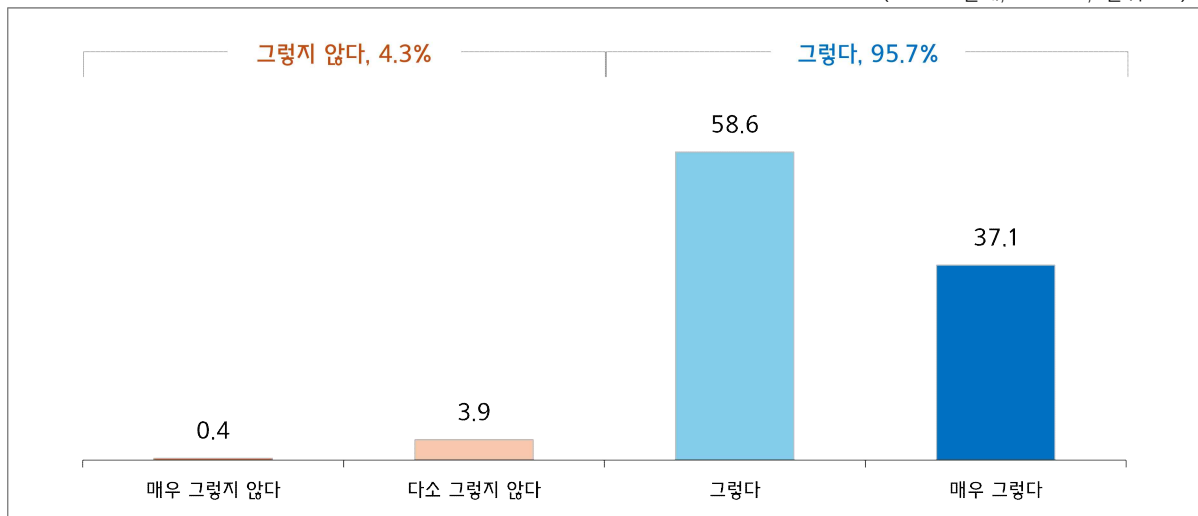
5.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1) 과징금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은 4.3%(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나타남

[그림 11] 과징금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12] 과징금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체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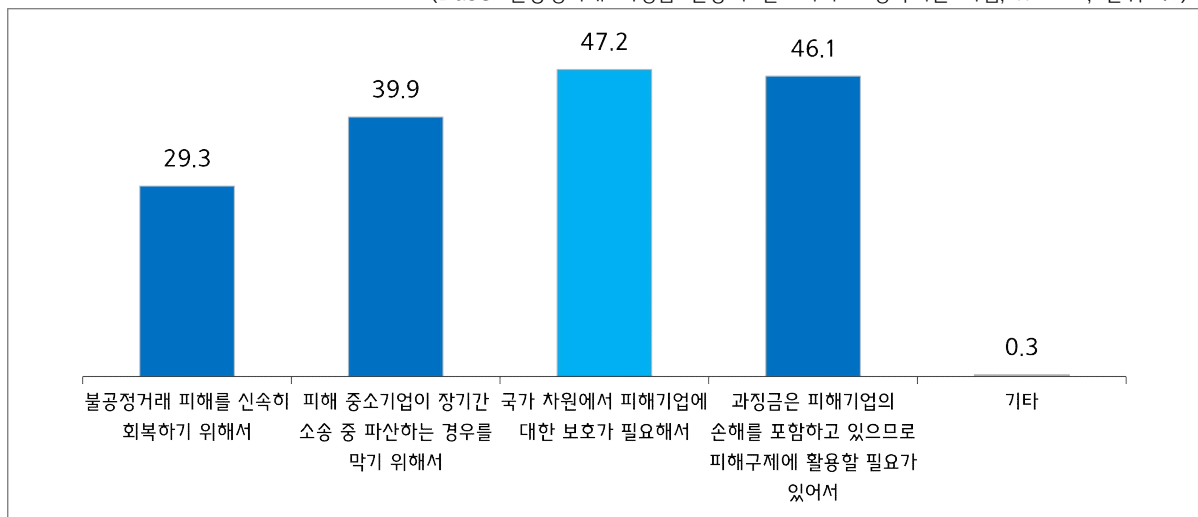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700)	0.4	3.9	58.6	37.1

(2)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

-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

(Base: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n=670, 단위: %)



[표 13]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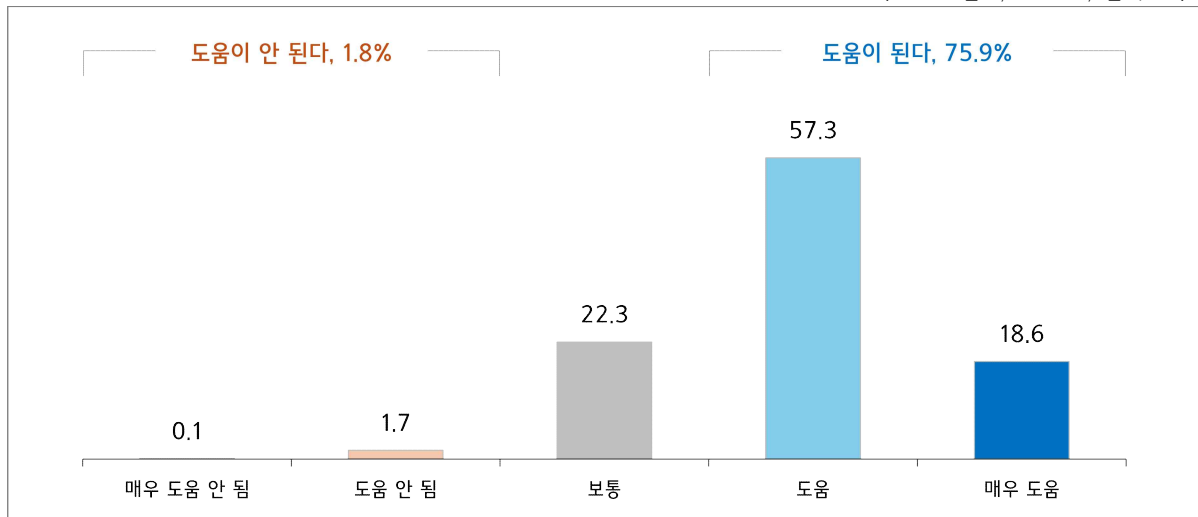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기타
전 체	(670)	29.3	39.9	47.2	46.1	0.3

6. 과징금 활용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기금 도움 정도

-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업 지원기금 마련 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은 75.9%(도움, 매우 도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은 1.8%(도움 안 됨, 매우 도움 안 됨)로 나타남

[그림 13] 과징금 활용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기금 도움 정도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14] 과징금 활용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기금 도움 정도

(전체기업,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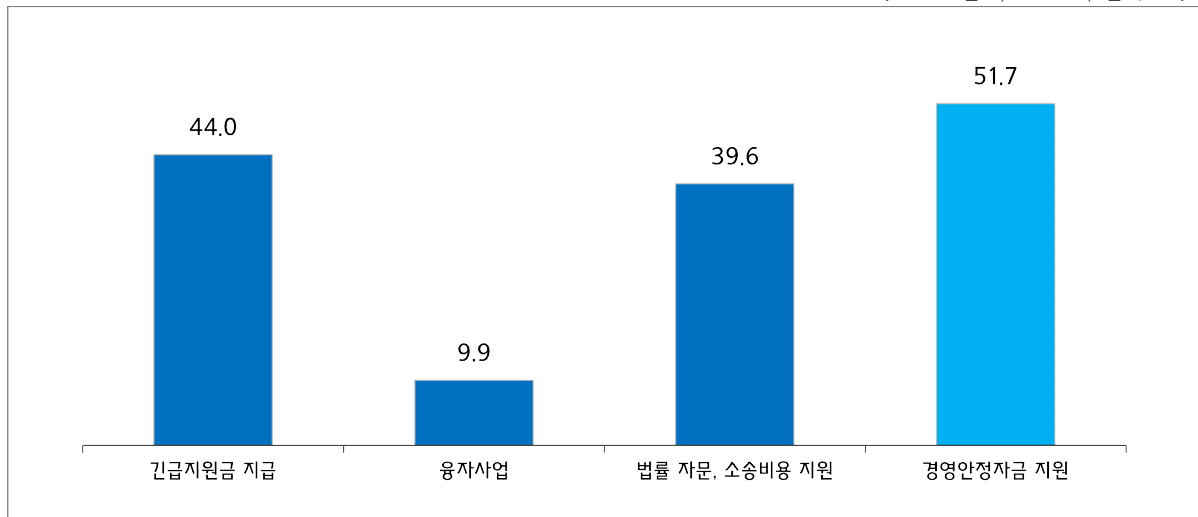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전 체	(700)	0.1	1.7	22.3	57.3	18.6

7. 지원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

- 지원기금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로한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51.7%)이 가장 많았고, ‘긴급지원금 지급’(44.0%), ‘법률 자문, 소송비용 지원’(3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지원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

(Base: 전체, n=700, 단위: %)



[표 15] 지원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

(전체기업,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긴급지원금 지급	융자사업	법률 자문, 소송비용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 체	(700)	44.0	9.9	39.6	51.7

8.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타 의견

-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으로는 ‘피해금액 지원’, ‘현행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마련’, ‘법률 지원’ 등의 의견이 나타남

[표 16]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타 의견

(n=500, 단위: 개사, %)

내 용		빈도(건)	비율(%)
[전체]		(103)	100.0
제도	현행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마련	(9)	8.7
	관련 제도 안내 및 홍보	(7)	6.8
피해 기업 지원	피해금액 지원	(20)	19.4
	법률 지원	(7)	6.8
	피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6)	5.8
기타	원청기업일 불공정거래 인식 개선과 피해 사전 차단	(1)	1.0
	조사 등 빠른 처리 필요	(4)	3.9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기업교육 등 필요	(1)	1.0
	불공정 신고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생존 방안 필요	(2)	1.9
	과징금 추징된 불공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1)	1.0
	그 외 기타	(45)	43.7